

#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1991. 6. 24

윤 덕 희(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1. 유고연방의 위기의 내용 .....	3
가. 현 황 .....	3
나. 역사적 배경 .....	4
(1) 민족적, 문화적 배경 .....	4
(2) 티토에 의한 유고통합의 유지 .....	4
다. 민족간의 갈등 .....	5
(1)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간의 분쟁 .....	5
(2) 슬로베니아공화국의 분리주의 .....	6
(3) 코소보의 민족문제 .....	7
(4) 세르비아공화국내의 민주화운동 .....	8
라. 연방권력상의 문제 .....	9
(1) 연방간부회의 .....	9
(2) 연방군 .....	10
마. 경제위기 .....	11
2. 유고연방의 해체위기에 대한 전망 .....	12
가. 대립되는 두 연방안 .....	12
(1) 느슨한 연방 또는 연합안 .....	12
(2) 중앙집권적인 연방안 .....	12
나. 유고연방의 해체 시나리오 .....	13
(1) 두 연방안간의 타협 .....	13
(2) 군부의 개입과 민족간의 충돌로 인한 내전 .....	14
(3) 연방의 해체 .....	14
다. 주변국가들의 반응 .....	14
3. 결 어 .....	15

빈 면

# 1. 유고연방의 위기의 내용

## 가. 현 황

- 최근 유고연방은 공화국들의 분리주의 움직임과 민족간의 갈등의 심화로 연방 해체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바 그 직접적인 요인은 첫째, 1987년 이후 세르비아의 공산주의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의 과격한 민족주의 정책 실시이며, 둘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민주화경향에 따른 공화국들의 강한 민족적 요구의 분출로 분석됨.
- 연방내 갈등의 양상은 다음과 같음.
  - 정치적 측면: 동구 개혁과 더불어 1990년 공화국내의 자유선거후 비공산 민주정부가 이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등의 공화국들과 공산정부가 지배하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사이에서 민주화 개혁 및 연방구도의 변화에 대한 의견 충돌이 노출되어 왔음.
  - 경제적 측면: 경제위기의 심화와 경제개혁의 문제가 맞물려 시장경제체제의 수용을 추진하는 북서부의 부유한 공화국들(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과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의거한 점진적인 개혁을 고수하는 낙후한 남부지역(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간의 갈등이 심화됨.
  - 민족적·종교적 측면: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그리스정교와 로마카톨릭),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그리스정교와 이슬람교)간의 오랜 민족적, 종교적 반목이 세르비아의 패권주의에 자극 받아 민족분규로 발전됨.

## 나. 역사적 배경

### (1) 민족적, 문화적 배경

-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은 ‘남슬라브족’에 속하는 민족으로서, 민족별로 6개 공화국(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과 2개의 자치주(세르비아공화국내의 코소보와 보이보디나)를 형성하고 있음.
- 각 공화국 또는 자치주는 다른 소수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유고내의 민족 분규의 불씨가 되어왔음.(부록참조)
- 유고의 국가구성의 특이성은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차이로 대변됨. 북서부에 위치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로마카톨릭교를 신봉하고 오랫동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귀속되어 문화적, 역사적으로 서구와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달하였음. 반면에 남부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그리스정교 또는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4세기 동안 터어키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음.

### (2) 티토에 의한 유고 통합의 유지

- 1차대전후 현재의 영토위에 최초의 유고슬라비아 민족국가(Nation-State)가 형성되었으나, 세르비아인들의 지배권하의 강제적 통합정책은 민족적 대립을 고취시켜 2차대전의 발발과 함께 친나치 ‘크로아티아독립국’이 수립되는 등 민족간의 내란을 초래하였음.
- 티토는 공산정권수립후 양차대전 중간기의 통합정책의 실패를 교훈삼아 연방제를 통해 각 지역 민족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통합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함.
- 유고의 연방제는 「자주관리제도」를 통한 분권화와 함께 각

공화국에게 점점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자율권을 허용함으로써 연방권력의 약화를 초래하였음.<sup>1)</sup> 그러나 티토 생전 시는 그의 권위와 개인권력 그리고 소련 위협의 존재로 국가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었음.

- 1980년 티토 사후, 유고의 구심점없는 연방체제 운영은 자유화 풍조, 경제위기의 심화 등의 이유로 민족분규를 가속화시킴.

## 다. 민족간의 갈등

### (1)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간의 분쟁

-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큰 두 민족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간의 충돌은 지리적인 인접성, 오랜 동안의 종교적, 민족적 경쟁 및 이에 따른 유고연방의 전망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1987년 민족주의자 「밀로세비치」가 세르비아 공산주의자 연맹의 의장에 등장하여 '범세르비아주의'에 입각한 팽창정책을 실시해온 바, 이는 반세르비아적 전통을 가진 크로아티아공화국의 분리주의 운동을 촉발시킴.
- 1990년 8월에 출범한 비공산계 민족주의적 성향의 「투지만」 정부는 12월 연방으로부터의 분리절차를 밝힌 공화국헌법 채택함. 또한 공화국헌법이 연방헌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둔 법 개정, 독자군 창설의 선포 등을 통해 분리 움직임을 표출함.
- 이에 대해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정권은 크로아티아공화

---

1) Paul Shoup, "The National Question and the Political Systems of Eastern Europe," in Sulva Sinanian (ed.) *Eastern Europe in the 1970s*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2), pp. 137~153.

국내의 세르비아인(60만으로 크로아티아공화국 전체의 12% 차지)들로 하여금 크로아티아의 분리 움직임을 저지하려 시도함. 1990년 4월 세르비아인들의 거주지에 '크라니아 세르비아 자치구'를 선포한 바 있으며, 1991년 4월 세르비아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연방으로부터 탈퇴에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연방탈퇴의 경우 세르비아공화국에 편입하여 유고연방내에 남을 것을 결정하였음.

- 한편 크로아티아내의 세르비아인들은 1990년 하반기부터 크로아티아민주정부에 대항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켜왔으며 1991년 3월이후 크로아티아공화국의 경찰예비병력과 세르비아 민병대간의 최대의 유혈충돌이 발생하여 현재 내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1991년 5월 19일 크로아티아공화국은 연방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5%의 주민(세르비아인 제외)이 분리독립을 지지하였고 29일에는 독립주권국가임을 선포하였으나, 실제로 크로아티아공화국이 독립을 할 경우 세르비아와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2) 슬로베니아공화국의 분리주의

- 슬로베니아공화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서구에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6개 공화국 중에서 가장 부유한 공화국임.
- 유고연방 전체인구의 8%밖에 차지하지 않으나 연방재정의 21%,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의 18% 등 연방내 가장 높은 재정 부담을 떠맡고 있어서 남부의 경제적,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에 대한 불만과 연방에 대한 비난이 높아왔음.
- 동구의 개혁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있어서 유고연방내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세르비아와 충돌이 끊이지 않았음.

- 1990년 4월 비공산 민주정부가 집권한 이래 7월에는 경제적 자치권 및 분리·독립권까지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 연방에 대한 공화국의 자율권이 강화됨. 같은 해 12월 독립 시기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88%의 주민들의 지지로 '슬로베니아공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선포하고 오는 6월26일 연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음.
- 슬로베니아공화국은 단일종족으로 구성(91%가 슬로베니아인)되어 분리·독립에 따른 세르비아와의 민족적 분쟁의 가능성은 적으나 다른 공화국에게 독립선포의 선례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반대 또는 개입이 예상됨.

### (3) 코소보의 민족문제<sup>2)</sup>

- 세르비아공화국의 두개의 자치주 중의 하나로 이슬람계 알바니아인들의 꾸준한 인구증가와 세르비아인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로 현재 80%의 알바니아인과 10%의 세르비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코소보는 중세 때부터 세르비아왕국의 중심지였으므로 세르비아인들은 강한 애착을 나타냄.
- 코소보자치주는 1971년 이후 티토에 의해 폭넓은 자율권을 보장받아 왔으나, 티토 사후 정치적, 문화적 자율권의 제약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1980년 이래 알바니아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어 왔으며, 세르비아인들

---

2) Jaroslav Blaha, "Les Principales minorites nationales En Europe de l'Est," i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l'URSS et l'Europe de l'Est* (Paris, 1985), pp. 72~76.

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음.

- 특히 「밀로세비치」정권은 1990년 새 공화국헌법을 통해 세르비아내의 자치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함으로써 코소보주민들의 총파업, 민중봉기 등을 초래함. 이에 연방정부는 코소보에 대해 연방군 투입, 비상사태 선포 등 무력 진압을 해왔으나, 1990년 7월 알바니아 의회는 유고의 '자치공화국'임을 선포하고 현재 연방내의 공화국으로의 격상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함. 공화국으로의 격상은 곧 분리를 포함하는 자결권을 보장 받는 것을 의미함.

#### (4) 세르비아공화국내의 민주화운동

- 1990년 12월 세르비아공화국의 자유선거에서 「밀로세비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사회당」(구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여 '신스탈린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민주적 반체제 운동을 탄압해왔음.
- 드라스코비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쇄신당'을 중심으로 민주적 개혁파가 등장하여 공화국내부에서 친공산당파와 반공산당파, 개혁세력과 보수세력간의 대립이 표면화됨. 1991년 3월 베오그라드에서 자유, 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세력과 학생들의 시위는 연방군의 강제 진압에 의해 대규모 유혈사태로 발전함.
- 세르비아공화국내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군, 경찰력의 유혈진압은 내부적으로는 「밀로세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세르비아인들의 단결 약화 및 세르비아 공산권력의 약화를 초래했으며, 외부적으로는 북서부 크로아티아공화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의 분리·독립과 연방해체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라. 연방권력상의 문제

- 유고슬라비아의 정치적·민족적 갈등은 민족간, 공화국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연방권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음.

### (1) 연방간부회의

- 유고의 연방간부회의는 1990년 3월 공산당인 「유고 공산주의자연맹」이 각 공화국간의 대립 및 개혁파 보수파간의 분열로 기능이 마비된 이후 유고의 최고 권력을 행사해왔음. 특히 공화국간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음.
- 6개공화국과 2개 자치주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티토 사망후 대통령을 1년마다 윤번제로 자동선출하게 되어있음.
- 동구와 유고의 민주화개혁이후 각 공화국간의 민족적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연방간부회의내에서 새 연방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주요세력(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간의 의견 충돌로 최근들어 간부회의의 권한 약화 내지는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는 2가지 사건이 발생함.
  - 1991년 3월 친세르비아 성향의 연방군이 제안한 '국가비상조치'를 연방간부회의가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연방간부회의장인 세르비아대표 요비치가 사임함으로써 간부회의의 내부 분열이 노출됨.
  - 1991년 4월, 연방간부회의장(대통령직)의 선출과정에서 세르비아공화국을 비롯한 4개 대표(세르비아의 2자치주, 몬테네그로)의 반발로 「메시치」 크로아티아공화국 대표가 대통령직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연방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헌법상의 보장인 '집단지도체제'가 민족간의 대립으

로 붕괴하였음. 이는 대통령직이 군의 최고통수권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마비와 연방해체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음.

- 세르비아공화국은 크로아티아의 「메시치」가 비공산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그 의도는 향후 민족분규 처리와 연방체제 변화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판단됨.

## (2) 연방군

- 정치적, 민족적 혼란을 겪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유일한 연방기구로 판단됨. 또한 유고의 공산주의체제 와해후 변화를 겪지 않은 유일한 공산기구로서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교조적이며 반서구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민족적 분포는 전체 18만 군 중 세르비아인이 40%로서 대부분의 장교층을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11만명의 사병들은 다양한 공화국 출신으로 이루어짐.
- 연방군의 정치적 입장은 공화국들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강한 중앙집권적인 연방체제를 통해 국가통합을 고수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측면에서 세르비아의 「밀로 세비치」의 입장과 유사함.
- 현재 연방해체 위기에 대응하여 3군 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무력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군의 세르비아 편에서의 개입은 다른 공화국 출신 사병들의 탈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각 공화국내의 민병대, 준군비조직 등의 독자군의 수립을 조장할 것이고 이는 곧 유고내의 내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마. 경제위기

- 유고의 경제는 1980년대이후 만성적인 위기에 직면해오고 있는 바, 그 원인은 노동자자주관리제도의 관료화, 불완전한 시장경제의 도입에 의거한 급진적 경제개혁('제3의 길')의 실패, 분권화에 따른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의 심화 등 국내적 요인과 국제 유가의 폭등이라는 국외적 요인의 결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해 「마르코비치」 현 연방정부는 1989년 12월 안정화계획에 의한 엄격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이후 여전히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1990년, 인플레이 1,200%(1989년 2,500%), 산업생산 -10%, 실업 +7%(1990년말 총17%에 달함)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적자도 심화되어 210억달러에 이름.
- 경제위기는 지역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임. 낙후된 경제구조를 가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지방은 산업생산력의 감소와 인플레이에 있어서 북서부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유고경제의 위기가 두 공화국의 경제발전을 제지한다는 불만을 표현해 왔음.
- 따라서 산업이 발달하고 이미 서구와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북서부지역의 공화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유럽공동체(EC)에 편입되고자 하는 반면에, 세르비아를 중심으로하는 남부의 공화국들은 그들의 낙후된 경제구조가 급격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사회주의체제내에서의 온건한 경제개혁을 바라고 있음.

## 2. 유고연방의 해체위기에 대한 전망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여부는 현재 대립되고 있는 두 연방안(느슨한 연방 또는 연합안과 중앙집권적인 연방안) 사이의 타협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임. 두 연방안사이의 타협이 결렬될 경우 유고연방의 해체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해체 과정에서 군의 개입 또는 민족간의 유혈 충돌이 예상되어 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가. 대립되는 두 연방안

#### (1) 느슨한 연방(또는 연합)안

- 유고내의 모든 공화국들이 주권국가로서 상호 타협에 의해 느슨한 민주주의적 연합체를 구성하는 안으로서, 연합내에서 공화국의 법이 중앙(또는 연방)의 법에 우선함. 단일시장의 유지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전제 조건이며 연방의 경제권력은 중앙은행, 국가화폐 등을 통하여 존재하나, 과세, 안보, 외교관계는 구성국들에 그 권한이 주어짐.
- 이 연방안을 지지하는 공화국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선두로 하는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4개 공화국임. 정치세력으로는 현 유고연방의 수상인 크로아티아 출신 「마르코비치」와 그가 이끄는 ‘개혁세력동맹’(1989년 공산당붕괴 이후 유일하게 유고 전역에서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은 연방안은 미국, 유럽공동체(EC), IMF(국제통화기금), EFTA(구주자유무역연합)등의 서구 국가 및 국제기관에 의해 지지를 받고있음.

#### (2) 중앙집권적인 연방안

- 현 연방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분리주의적 움직임을 배제하고 유고연방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연방국가안임.

- 이 연방안은 공산권력이 이끄는 두 공화국(세르비아공화국과 몬테네그로공화국), 과 세르비아의 코소보와 보이보디나 두 자치주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음. 또한 현 연방제내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군부와 구 공산당의 후신인 「새 공산주의자 연맹 - 유고를 위한 운동」(국방부, 내무부의 현역 연방장관들과 혁명공신들로 구성)은 중앙집권적 연방안을 지지하고 있음.

## 나. 유고연방의 해체 시나리오

첫번째 시나리오는, 유고연방의 장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거나 희박한 가능성을 가진 전망으로서 두 상반되는 연방안간의 타협임. 둘째는 타협 결렬시 민족간의 충돌(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간) 또는 군부의 개입에 의한 내전의 발발이며 셋째는 내전을 면한 연방의 해체임. 또한 연방해체, 군의 개입, 민족전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음.

### (1) 두 연방안의 타협

- 세르비아가 제시한 연방안 중심의 타협은 이미 양차 대전중간기에 유고슬라비아를 내전으로까지 몰고간 해결책으로서 공화국들의 자율권 확대 요구 및 공화국간의 적대감을 고려할 때 또 다시 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할 것으로 분석됨.
- 유고의 모든 공화국으로 구성되는 민주적인 느슨한 연방 또는 연합으로의 전환은 현재 유고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됨.
  - 그러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협상은 밀로세비치의 완전한 양보 또는 권력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최근 그의 권력은 세르비아공화국내의 반공산시위로 약화되기

는 하였으나 권력포기의 전망은 안 보임.

- 또한 세르비아내에서 밀로세비치의 정권이 전복되고 현재의 제 1 야당인 「세르비아 쇄신당」의 「드라스코비치」가 권력을 장악할 경우 대화의 가능성은 있으나 민주야당 역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협의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2) 군부의 개입과 민족간의 충돌로 인한 내전

-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군의 개입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분리·독립을 막고 국가통합을 강화하려는 군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
- 특히 크로아티아의 분리·독립은 크로아티아내의 세르비아인들의 무장봉기와 군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3) 연방의 해체

- 느슨한 연방(또는 연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먼저 분리·독립을 선포한 후 나머지 2개의 비공산 공화국들(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에 의거한 독자적인 연합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세르비아는 '범세르비아주의'에 입각하여 몬테네그로는 물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코소보 자치주(이 경우 알바니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할 것임)를 병합시킴으로써 영토 팽창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주변국가들의 반응

- 유고슬라비아는 더이상 과거의 유럽과 아시아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함으로써 그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되었음.
- 현재 유고슬라비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세력인 서구는 유고연방의 해체와 내전의 경우 경제적, 정치적 봉쇄정책으로 유고를 고립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소련도 유고의 해체나 민족전쟁을 소련내의 민족문제에의 파급을 고려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서구와는 달리 유고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3. 결 어

- 유고슬라비아의 현재 위기는 민족문제의 해결이 점점 각 구성민족의 정치적, 문화적 자결권, 나아가 주권국가로서의 독립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됨.<sup>3)</sup>
- 또한 한 민족국가내에서도 구성국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달리할 때 독자적인 국가체제의 수립을 통한 이익보장도 불가피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 유고를 비롯하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민족문제의 해결은 진정한 정치적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 현재 유고슬라비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유고의 모든 공화국들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느슨한 연방 또는 연합으로서 이는 과거 2차세계대전 직후 티토가 구상했던 「발칸연맹」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그 내용은 권리와 문화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연합적인 다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에 알바니아를 비롯한 다른 발칸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발칸에 산재해있는 여러 민족들을 규합하는 것으로, 발칸에서 민족간의 갈등에 의한 전쟁의 위기를 배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Bruno de Witte, "Quel statut Pour les Minorités?", *Pouvoir*, No. 57, 199, pp. 115~117.

<부 록>

6공화국과 2자치주의 불평등 발전

	면 적	인 구(1)	문맹률(2)	실업률(3)	평균임금(4)
유 고	255,804km <sup>2</sup>	전 체 23,556,000 중 세 르 비 아 인:36.3% 크 로 아 티 아 인:19.8% 모 슬 렘: 8.9% 슬 로 베 니 아 인: 7.8% 알 바 니 아 인: 7.7% 마 케 도 니 아 인: 6% 몬 테 네 그 로 인: 2.6% 형 가 리 인: 1.9%	9.5%	11%	402,928 디나
세 르 비 아 공 화 국	56,000km <sup>2</sup>	전 체 5,832,000 중 세 르 비 아 인:85.4%	11.1%	11%	364,559 디나
크 로 아 티 아 공 화 국	56,538km <sup>2</sup>	전 체 4,681,000 중 크 로 아 티 아 인:75.1% 세 르 비 아 인:11.5%	5.6%	6%	437,870 디나
슬 로 베 니 아 공 화 국	20,251km <sup>2</sup>	전 체 1,943,000 중 슬 로 베 니 아 인:90.5% 세 르 비 아 인: 2.2% 크 로 아 티 아 인: 2.9%	0.8%	3%	615,853 디나
보 스 니 아 · 헤 르 체 코 비 아 공 화 국	51,121km <sup>2</sup>	전 체 4,443,000 중 세 르 비 아 인:32.2% 크 로 아 티 아 인:18.4% 모 슬 렘:39.2%	14.5%	14%	333,925 디나

	면적	인구(1)	문맹률(2)	실업률(3)	평균임금(4)
몬테네그로 공화국	13,812km <sup>2</sup>	전체 633,000 중 몬테네그로인:68.5% 모슬렘:13.4% 알바니아인: 6.5% 세르비아인: 3.3%	9.4%	18%	297,571 디나
마케도니아 공화국	25,713km <sup>2</sup>	전체 2,088,000 중 몬테네그로인:67.8% 모슬렘:13.4% 알바니아인: 6.5% 세르비아인: 3.3%	10.9%	16%	274,585 디나
코소보 자치주	10,900km <sup>2</sup>	전체 1,894,000 중 알바니아인:77.5% 세르비아인과 몬테네그로인:14.9%	17.6%	25%	272,554 디나
보이보디나 자치주	21,800km <sup>2</sup>	전체 2,052,000 중 세르비아인:55.8% 헝가리인:21.7% 크로아티아인: 7.1%	5.8%	11%	380,469 디나

(1) 1990 수치

(2) 10살이상, 1981년 수치

(3) 1989년 수치

(4) 1988년 수치(당시 1원은 2디나에 해당함)